

野, 與 불참 속 '제2양곡관리법·가격안정화법' 등 단독의결

농업민생 4법 본회의 직회부

野 “가격 변동성, 농가경영 위협
안정적 식량공급 어려움 초래”

與 “野, 협의 없이 일방적 처리
과잉생산 등 시장기능 잠식 우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간사 및 의원들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농업민생 4법 본회의의 부의 요구의 건 처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제2양곡관리법'과 '농산물가격안정화법' 등 농업민생 4법을 단독으로 의결해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야당의 강행 방침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처리된 농업민생 4법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수확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농어업회소법 개정안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단독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상정되지 못하고 60일 이상 돼 상임위에서 다시 의결해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은 쌀이나 주요 농수산물의 기준 가격을 정하고 기준 아래로 가격이 하락할 시 차액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정

부여당은 가격체제에 대한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장기적이고 상당한 재원이 소요된다며 법안에 대해 반대해온 바 있다.

국회 농해수위 야당 의원 일동은 농업민생 4법 처리 후 국회 소통관을 찾아 처리 이유에 대해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농가 경영을 위협할 정도이기 때문”이라며 “농가당 연평균 농업소득은 30년 전인 1995년 1047만원에서 2022년 949만원으로 9.4%나 감소했다. 그런데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56.3%나 하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경영 위협의 증가는

농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민을 위한 안정적 식량 공급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보다 하락했을 때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차액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우리나라 7개 광역 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부족한 지방 재정과 지역적 한계 때문에 지자체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많다”며 “국가적 차원의 제도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

인 국민의힘이 대안없는 반대만 하지 말고 21대 국회 임기내에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 4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대안없이 반대만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법사위의 괴물같은 권한 때문에 그렇다”며 “법안도 법안이지만 제도에도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위성근 의원은 “(지자체에서) 가격안정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걸 법제화하는 것”이라며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선 농가 소득이 안정돼야 한다. 심은 작물이 1000원인데, 가격이 800~900원이면 1000원까지 차액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할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 수순을 밟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신정훈 의원은 “동일한 법안을 그대로 한 것이 아니라 여당에서 반대한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가격안정제도 탑재해서 수정했다”고 주장했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대비 5~8%하락

했을 때라는 구체적 조건하에 정부가 쌀을 매입하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선 장관이 미곡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기준 이상으로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생산된 미곡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했다. 또한, 기준 이상으로 폭등하거나 폭등이 우려되는 경우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의사 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말았다”며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고 규정했다.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지난해 4월 정부의 재의 요구 이후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부활시켰다”면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과잉생산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서 시장기능을 잠식하고 오히려 농가소득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많은 제도”라고 반발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민주당 “이화영, 검찰청서 진술조작 모의... 대검 검찰 촉구”

野 대책위, 수원지방검찰청 방문
진상조사단 꾸려 총력 대응 나서
“수원지검, 수사 주체 아닌 대상”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지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의원들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쌍방을 대북 송금 진술조작 의혹과 관련한 항의 방문에 앞서 수원지방검찰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이재명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을 대북 송금과 관련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술판 진술 조작’ 의혹에 대해 수원지검을 직접 방문하는 등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의 자체 감찰을 요청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출석한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을 그룹 회장 등의 대북송금 진술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수원지방검찰청에 참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서 술자리가 있었다고 발언했다.

민주당은 자체적인 진상조사단을 꾸

리면서 해당 사안에 총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지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을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검찰청 안에서 연어, 회담밥, 소주 파티를 하며 진술조작을 모의한 상세한 정황을 진술했다”며 “사실이라면 정치검찰이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그야말로 죽이기 위해서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한 수사능단이자 중대범죄 의혹이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정 진술 이후에 2차례의 입장문을 통해 수원지검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검의 감찰을 촉구했다”며 “하지만 대검의 공식적인 감찰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원지검은 장문의 알람을 통해 ‘명백한 허위’이며 ‘회유나 진술조작이 전혀 없었다’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수원지검은 ‘진술조작’ 모의 의혹의 수사의 주체가 아닌 수사대상”이라며 “피의자가 본인의 죄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하면 명백한 허위가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대책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대검찰청에 공식적인 감찰을 요구했다. 이들은 “수원지검의 증거인멸이나 증거조작, 은폐를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대검이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야당 대표를 상대로 한 진술조작 모의 의혹을 그냥 유야무야 덮어서는 안될 것이

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교도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과 이번 수원지검의 지휘 책임을 맡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당장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해당 검사들을 고발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와 검찰도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철저한 자체 조사를 통해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야당 대표에 대한 허위 진술을 강요해 사법 질서를 농락하고 수사권을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봤을 때도 지체 없는 진상 조사와 철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내부 감찰을 촉구했다. /박태홍 기자

與, ‘국민의미래’ 흡수합당 착수... 선거보조금 28억도 귀속

野도 같은 수순... 보조금 품수 비판

국민의힘이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대한 흡수 합당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18일 당 상임전국위원회(위원장 이한승 의원)를 소집하고 국민의미래와의 흡수 합당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온라인으로 개최된 상임전국위 회의에서 ARS(자동응답시스템) 투표율 실시한 결과, 총 투표자 43인(투표율 70.49%)이 전원 찬성해 전국위원회 소집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오늘 22일쯤

전국위를 열어 ARS 투표를 통해 흡수합당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양당 수임 기구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 합당 절차가 최종 마무리된다. 해당 과정은 늦어도 다음 주말 전에는 완료될 전망이다.

국민의미래는 이번 총선에서 득표율 26.67%로 18명의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 받았다. 양당이 합당을 완료하면 22대 국회의 국민의힘 의석은 지역구 90석과 비례대표 18석을 합쳐 총 108석이 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미래는 지난달 선거보조금 28억 443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는 국민의힘이 국민의미래에 ‘의원 귀주기’를 한 덕분이다. 정치자금법 상 선거보조금 지급 당시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총액의 5%를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당이 합당하면 위성정당이 받은 선거보조금은 모(母) 정당에 귀속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도 같은 수순을 밟고 있고, 양당에 ‘위성정당을 통한 보조금 품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예진 기자 syj@

홍준표, ‘총리 김한길, 비서실장 장제원’ 거론

尹과 만찬회동 사실 뒤늦게 알려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최근 만찬 회동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현재 윤 대통령은 4·10 총선 이후 사의를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 인선을 두고 속고 중인데, 여권에서 당 대표와 대선 후보 등을 지낸 홍 시장과 만난 것이다.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총리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대통령비서실장에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추천했다

고 한다.

1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홍준표 시장과 서울 모처에서 만나 저녁 식사를 하며 향후 국정 기조 및 민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홍 시장은 “대통령비서실장은 정무 감각이 있고 충직한 인물, 총리는 야욕이 없고 야당과 소통이 되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는 김한길위원장, 차기 대통령비서실장 후보로는 장제원 의원을 추천했다고 한다.

/서예진 기자